

독일의 통일담론에서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긴장?^{*}

: 한반도 통일론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노 현 중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nhj56@snu.ac.kr)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담론에서 ‘민족’과 탈민족적 ‘세계시민주의’ 사이의 긴장을 조명하였다. 독일 진보진영 내의 이견(異見)은 사회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시민들로 하여금 냉엄한 분단질서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담론과 충돌하여 오히려 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은 동독의 ‘2 민족 2 국가’론에 대응하여 서독이 ‘1 민족’을 고수하며 ‘2 국가’의 현실 속에서 독일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을 다루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에서 ‘민족’과 ‘세계시민주의’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계 일각의 주장처럼 ‘2 국가’로 성급하게 전환하기 보다는 ‘1 민족 1 국가’를 유지하되 그 각론을 유연하게 변경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독일 통일, 동방정책, 민족주의, 세계시민주의, 남북통일, 교류협력

^{*} 이 논문은 2021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들어가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 날인 1989년 11월 10일 기독교민주연합(CDU)의 당수이자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은 폴란드에서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미군의 전용기를 빌려 베를린에 도착하였다. 새로운 열기로 가득찼던 그날 밤 헬무트 콜은 자신의 오랜 정치적 라이벌이자 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사회민주당(SPD)의 전임 수상 빌리 브란트와 함께 서독의 국가(國歌)를 합창하였다. 새로운 단계에 막 진입한 독일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두 지도자가 과거의 갈등을 잠시 뒤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은 모범적인 독일의 정치를 상징한다.

위의 사항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빌리 브란트가 당시 사회민주당의 젊은 당수였던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과 매우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그와 결별했다는 사실이다. 1943년 생인 오스카 라퐁텐은 68혁명 세대의 정치인이며, 빌리 브란트가 사회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새롭게 수혈한 인사였다. 이 두 인사는 독일의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하였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반면 라퐁텐을 비롯한 사회민주당의 젊은 인사들 그리고 서독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 귄터 그라스, 위르겐 하버마스는 독일의 통일과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회학자 클라우스 오페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일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냉전적, 반평화적 혹은 적대적인 반공산주의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는 민족주의 그 자체에 회의적이었던 독일 진보진영의 입장이 일정 수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평화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민족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세계시민주의’¹⁾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에 기반한

1)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철학적 관점에서 ‘세계시민주의’는 기존 사회질서와 정면적으로 대립하였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서 기원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출신지를 묻는 질문에 ‘세계의 시민’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신을 혈통, 출신도시, 사회계급, 자유민이라는 신분과 성별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러한 사상적 조류를 긍정하고 있지만 도덕적, 이성적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동물과 다른 생명체를 배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누스바움 2020, 16-32). 세계시민주의를 현대의 제도권 정치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자 데이비드 헬드의 개념이 보다 유용하다. 헬드는 세계시민주의의 지향점을 1) 동등한 가치와 품위 2) 활발한 행위자 3) 개인적인 책임 4) 합의 5) 공공부문에서 투표를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6) 포용성과 보완성 7) 심각한 위험에 대한 극복 8) 지속가능성으로 제시하였다(Held 2005, 12). 68혁명 이후부터 통일 이전까지 사회민주당의 당원들 및 서독의 진보진영이 이 가치를 완전하게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선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들은

통일국가의 재건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탈(脫)민족주의’적인 입장이었지 ‘반(反) 민족주의’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즉 통일과정에서 독일 진보진영 내의 이견(異見)은 사회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시민들로 하여금 냉엄한 분단질서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담론과 충돌하여 오히려 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²⁾ 현재 대한민국은 성숙된 민주주의 체제와 다원화된 사회를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진보진영의 영향력 확대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향후 평화확립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정책이 분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다. 첫째,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서독사회의 변화와 1970년대 초의 동방정책의 핵심쟁점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이 시기 사회의 급진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으며 동시에 ‘신동방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비록 이 기간에 양자간의 가시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향후 갈등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었다. 둘째,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부터 통일을 이룩한 시점까지 본격적으로 전개된 진보진영 내부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동서독 모두 민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민족’은 분명 동서독 주민을 결속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낭만적 결속은 통일 이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한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당과 진보지식인들은 국가연합안을 비롯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헬무트 콜의 강령에 비해 선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으로 말미암아 서독과 독일 전역에서 진보진영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셋째, 독일의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조명해보도록 하겠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민족’은 매우 강력하고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³⁾ 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하였던 것에 반하여 민족주의는 도전받

보다 전통적이고 때로는 보수적인 면모를 보였던 같은 당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과도 갈등을 빚었다.

- 2) 독일통일에 관련한 주요 연구동향은 대략적으로 1)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과정과 그 이후 발전된 독일관계 2) 미소관계의 악화와 보수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된 독일관계 3) 동독의 사회운동,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통일에 대한 열망 4) 통일과정에서의 소련의 설득과 유럽통합 5)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문제와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에서부터 동독의 총선거를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이 확정된 1990년 3월 사이 통일을 둘러싼 독일의 진보진영 내부의 노선 차이와 갈등은 제한적으로 연구되었다.

- 3) 진보진영은 노태우 정부의 ‘창구단일화’ 원칙을 거부하며 단독으로 임수경 씨를 북한에 파견하면서

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긴장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탈민족주의적인 ‘신좌파’의 등장과 동방정책을 통한 ‘민족’의 고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서독은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양대 기성정당 (기독교 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의 통치구조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분출하였다. 청년세대 중심의 새로운 사회세력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진보적 아젠다에 기초하여 기존 정치권과 갈등하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창출하였다. 정치영역을 살펴보자면 빌리 브란트의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서독 정치사에서 유의미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브란트는 노동계급의 요구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기존의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대동독 정책을 수정한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탕트를 구축하였다. 또한 과거 보다는 훨씬 유연한 ‘문화민족’을 제시하면서 ‘1 민족’에 기반한 동서독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사회의 급진화 혹은 민주주의의 성숙이 민족정책과 파열음을 내지는 않았지만 양자 사이의 긴장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 전후 서독의 제도적 민주주의 확립과 대동독 인식

먼저 전후 서독의 사회적 특징과 대동독 인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 수상은 전후의 혼란한 안보, 국내정치 상황을 수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훌륭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비록 히틀러의 치하의 국가기관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었던 인물들을 완전히 숙청하지는 못하였지만, 진실한 반성에 입각한 ‘탈-나치화’는 순조롭게

독자적인 민족정책을 고안하였다. 정책방향은 조금 달랐지만 민족주의는 보수진영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1992년 대권에 도전하였던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의 정당은 통일국민당이였다.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당의 강령에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적시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민족을 앞서는 동맹국은 없다”며 민족주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양측에서 ‘민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33년에 파괴된 제도적 민주주의가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서방통합정책의 추진 및 마셜플랜의 적극 참여하여 신속한 전후복구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아데나워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가까스로 수립하고 유지했지만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냉전이 본격화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국내정책을 펼쳐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가령 ‘5권의 소책자 재판(Fünf-Broschüren-Urteil)’에서는 사회주의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아닌 책자를 기소하는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최승환 2006, 215). 군대의 취약점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체포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슈피겔 사건’을 일으켰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데나워 수상은 냉전구조를 탈피하고자 하는 대담한 시도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전독일인의 민주적 선거원칙을 이유로 소련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나토에 가입하였다. 서방진영 즉 미국, 영국, 프랑스와 제도적·이념적 결속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 시기 독일에서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 공산진영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인 프랑스와 영국도 전범국가 독일에게 여전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Mommsen 1983, 561). 즉 패전 이후부터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까지 서독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 ‘민족주의’와 ‘민족통일’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웠다.

물론 아데나워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전후 사회민주당을 재건하였던 쿠르트 슈마허는 아데나워의 서방 통합정책과 대동독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집권당에 비해 분단상태를 훨씬 임시적인 상태로 간주하였으며 동시에 민족자결권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중립화된 통일 독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1952년 쿠르트 슈마허 사후에 통일을 주장하였던 전독일민족당의 구스타프 하이네만 (이후 서독의 대통령에 오름)과 헬레네 베셀 등이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여 의회에 진출하였다(파울렌바흐 2017, 109-117). 그럼에도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비전으로 새로운 동서독관계를 확립할 수 없었다.

동서독은 남북한처럼 전쟁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소련의 압박에 의해 동독지역의 사회민주당이 공산당과 강제적으로 합병된 사건으로 인해 진보적인 사회민주당조차도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당시 동독지역 사회민주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오토 그로토프는 명분 없는 합당에 앞장섰으며 그 공로로 사망 직전까지 동독의 수상자리를 지키며 편안한 삶을 향유하였다. 하지만 서독지역의 사회민주당을 대표하고 있었던 쿠르트

슈마허와 동독에 있었던 그의 지지자들은 양당 합당을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서독의 사회민주당 당원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쿠르트 슈마허의 첩자’⁴⁾라고 부당하게 박해를 받았던 사건에 대한 양금을 가지고 있었다. 동독에 대한 비판적인 면모는 서독의 전국 노동조합인 DGB(Deutscher Gewerkschaftsbund)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서독의 노동계급 역시 민족문제에 대한 일정한 입장을 제시하였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부정적이었다. 1956년 DGB 총회에서 제정한 ‘독일통일헌장’에서는 “동독에 대한 비판이 서독의 사회, 민주정책의 약화와 연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족문제와 민주적 투쟁을 구별하였다(이진모 2004, 28). DGB가 동독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공산당을 탄압하는 아테나워 정부에게 불필요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서독의 노동계급은 소련과 동독의 사회주의 통합당이 1953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베를린 봉기’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서베를린의 노동자들은 동독의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직접 동베를린으로 넘어가 연대하였고 시위에 함께 참여하였다.⁵⁾ 즉 서독의 보수와 진보진영은 기본적으로 동독의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2. 서독에서의 민주주의의 심화와 탈민족주의의 대두

동독에 대한 서독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별개로 서독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

4) 합당 이후 당내에서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계열의 인사들의 갈등이 지속되었음에도 큰 파열음을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1949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의 비교적 수평적이고 평등했던 관계가 변화가 시작하였다. 1949년 1월 28일 제 1차 사회주의 통합당 당 대회에서는 보다 선명하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당의 부르주아적 요소를 제거할 것, 소련이 국제사회주의 운동의 기수라는 점을 승인할 것이 공표되었다. 또한 기존의 사회민주당 계열 가운데 사회주의 통합당에 비-협조적이었던 인사들의 행위를 기회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심지어는 이들을 쿠르트 슈마허의 첩자들과 간주하였다. 또한 토론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 번 당의 노선이 확립되면 복종해야 한다는 레닌주의적인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도 강조되었다(Thomanek 외 1989, 47-49).

5) 베를린 봉기의 사망자의 수는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 물론 당시 미국 측에서는 사망자 수를 최대 400여명으로 짐작하기도 하였지만, 약 50여명에서 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학자들의 중론이며 20여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 당시 15명의 슈타지와 경찰관들 역시 시위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사회주의 통합당은 체제가 붕괴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건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의 모든 선전물, 당 기관지 그리고 심지어 교과서에는 서독과 미국의 시주를 받은 반-혁명분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선전하였다(Milligton 2014, 5).

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내외부에서 급격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즉 194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청년으로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한 시기였다. 정치학자 로날드 잉글하트의 주장처럼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하여 산업화 시기의 위계적인 생산조직이 조금 더 수평적인 형태로 변모함에 따라 ‘자기 표현적(self-expression)’ 가치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들이 소위 말하는 ‘68혁명’세대이다. 이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68혁명 세대는 기존의 물질주의 중심의 변혁운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진보진영내의 주류 노동운동 세력과 갈등하였다. 이들 세대는 ‘노동계급’이 역사변혁의 주체라는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명제를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독의 노동계급은 이미 ‘부르주아화’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은 급진적인 정치를 위한 사회기반을 완전하게 상실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Markovits 외 1993, 50-51). 이들은 한편으로 사회주의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회주의가 단순하게 정치권력과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모든 권력관계와 권위구조를 평등하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길혀홀타이 2009, 252). 사실 서독의 노동계급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열매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투쟁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하기 보다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게다가 1960년대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기독교민주연합과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사회민주당은 1966년 기독교민주연합과의 대연정에 참여하면서부터 정부노선과 다른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청년층으로 대표되는 ‘신좌파’는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본격적으로 갈등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민주당의 하부조직이었던 ‘사회주의 독일 학생 연합(Sozialistische Deutscher Studentenbund, SDS)’은 1959년 고테스베르크 사회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민정당으로 변모한 것을 문제삼아 1961년 사실상 관계를 청산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담은 혁명운동을 의회 밖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68혁명 세대는 민족을 넘어서 초국가적인 연대와 변혁을 모색하였다. 1954년도부터 SDS에 가입하여 활동한 클라우스 메쉬카트는 “신좌파의 형성에는 국제적 맥락이 그

6) 실제 잉글하트의 1981년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68혁명세대에 해당하는 서독의 35-44세(1937-1946년 생)는 기성세대 보다 자기표현 가치와 세속적·합리적 가치가 강하게 나타난다(잉글하트 2011, 204).

시초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 운동의 초국가적 성격이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메쉬카트 2008, 97). 실제로 68혁명은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사회주의 체코에서도 발생한 전지구적인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반제국주의’, ‘베트남전쟁 반대’, ‘권위주의 타파’, ‘대학개혁’, ‘일상에서의 혁명’과 같은 공통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자유로운 해외여행,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한 미디어 덕분에 초국가적인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역사학자 마틴 클림케가 “서독의 68혁명세대들은 반미주의자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서독의 반항적인 청년문화는 미국의 청년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미국인들과 함께 하였던 반미운동이었다” 라고 위트있게 지적하였듯이 국내의 사회이슈를 뛰어넘은 보편적인 이슈를 위해 연대하였다(Klimke 2010, 7). 실제로 독일의 SDS는 미국의 ‘민주사회학생회(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 SDS)’와 연대하면서 반전운동, 반제국주의 운동,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노동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연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민권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흑인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백인 청년들도 흑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이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가령 사회운동단체인 ‘프리덤 서머(Freedom Summer)’에는 약 700 여명의 백인 명문대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미시시피 주의 흑인 유권자 등록 확대를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지켜본 서독의 신좌파 학생들은 인종을 넘어서 초국가적인 연대에 감동을 받고 적극적으로 투신하였다. 즉 이들은 반(反)민족주의가 아니라 탈(脫)민족적인 지향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이 민족보다 더 중요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였다.

셋째, 68혁명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신좌파’들은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68혁명세대가 탈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SDS는 1950년대부터 민족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아젠다에 따라 동독 측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동독의 공식 국가기구인 ‘자유독일청년단(Freie Deutsche Jugend)’과 협상을 벌이기도 하였다. 다만 교류가 진행될수록 동독 측 인사들의 기계적인 언사와 행동에 실망하였으며 매력없는 동독이 서독체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들은 동독의 ‘국가연합’이 아니라 동서독 내부의 동시적인 변혁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독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았다. 196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전쟁과 같은 보다 시급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탈민족적인 지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독일문제의 중요성은 후순위로 밀렸다(이동기 2009). 이 뿐만 아니라 1968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체코의 개혁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이들의 도덕적 정당성의 완전한 파산을 가져왔다. 이 당시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은 뉘체흐와 체코공산당의 개혁노선에 심적으로 동조하고 있었으며 소련의 강압적인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독의 공산당(아테나워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새롭게 재건되었음)은 공개적으로 소련을 지지하면서 유혈진압을 정당화하였다(Pelz 2016, 195). 이는 서독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모두에게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강렬한 반발감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신좌파' 산하의 여러 조직은 독일공산당과 연계된 인물들을 모두 제명시켰다.

68혁명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루디 두치케와 베른트 라벨 같은 인사들은 경직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들이 민족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억압적인 동독을 피해 서독으로 이주하였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동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루디 두치케는 동독의 사회주의통합당의 서기장인 발터 울브리히트의 사진을 불태웠다. 또한 베트남전 반대시위에서도 동독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정대성 2019, 233-234). 68혁명의 열기가 사라진 1970년에는 '탈핵' 및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 역시 사회주의 동독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1975년 와인생산지로 유명하였던 '빌(Wyhl)'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과 주민들은 바텐뷔르텐베르크 주정부가 마치 '나치 정부' 혹은 '동독의 사회주의'와 비슷하다면서 주정부의 관료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였다(Milder 2017, 3-6). 즉 '신좌파'들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반공주의'에 반대하였지만 그렇다고 현실 사회주의와 동독에 우호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위와 같은 변혁운동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처럼 보이며, 혁명도 정권교체도 이룩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하였다. 여기서 '신좌파'운동과 이들의 탈민족적인 성향을 기술한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시기부터 독일 사회에 본격화된 '탈민족적'지향은 향후 독일통일과정에서 심각한 분열을 야기하였다. 독일에서는 '민족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 '평화', '민주', '헌법'이라는 가치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고 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쉽사리 부활시키기 어려웠다. 반제국주의적이며 동시에 현실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신좌파 운동은 민족운동과 통일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 극우정당인 '독일 국민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이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의 득표율을 얻지 못해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지 못했다. 사실 온건한 보수적인 지식인들 역시 선불리 '민족주의'를 강조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동서독 모두 연합국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의 회복은 과거를 부정하는 행태로 간주되었으며 동시에 유럽의 ‘세력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었다. 따라서 서독의 좌우 정치세력들은 동방정책 수립과는 별개로 민족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동독과 사회주의 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3. 동서독 기본조약: 1 민족의 고수, 2 국가의 사실상 인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탈민족적’지향을 지닌 서독의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상상력에 기반한 문화운동과 정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시점에 동서독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새롭게 변모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에 개입하여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였던 미국은 공산권과의 대결보다는 평화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방향은 1969년 ‘닉슨독트린’으로 구체화 되었다. 같은 해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빌리 브란트는 1969년 10월 28일 수상 취임연설에서 기존의 동서독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천명하였다. 빌리 브란트는 동서독을 둘러싼 현실적인 제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연방정부(서독)는 동독을 국제법에 따라 승인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두 나라는 외국은 아니며 양국은 특별한 관계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같은 연설에서 UN 헌장에 기초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모든 독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⁷⁾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전범국가인 독일에게까지 당연하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었다. 브란트와 그의 특별보좌관 에곤 바르(Egon Karl-Heinz Bahr)는 민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스크바의 승낙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효과적인 외교를 통해 이를 달성하였다.⁸⁾

7) 출처: <http://asq.kr/yo7RWDX> (검색일: 2022.01.31.).

8) 1969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소련 측에게 비밀편지를 보냈다. 에곤 바르는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를 방문하여 서독이 추진할 새로운 정책들을 설명하였으며 소련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1969년 크리스마스에 소련 측이 밀사를 파견하여 서독과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힘에 따라, 에곤 바르가 1970년 1월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불가침 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조율하였다. 당시 소련은 중소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냉전의 최전선인 독일관계를 안정시켜야 만했다. 또한 체코의 유혈진압으로 더욱 더 악화된 서유럽과의 관계를 개선코자하였다. 서독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련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하였다. 소련은 서독의 루르 가스(Ruhr-gas)사와 향후 20년간 52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1970년 기준 5억 서독 마르크 상당의 금액이었다. 서독까지 파이프 연결을 위해서 소련에 12억 서독 마르크의 차관을 승인하였고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가까스로 서독과 소련사이의 모스크바 협정⁹⁾이 체결되었지만 동독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독은 빌리 브란트가 새로운 독일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빌리 브란트와 빌리 슈토프 수상(사회주의 통합당의 서기장이 아님)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소 실망스러운 조우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통한 압박, 동독에 대한 지원을 당근 삼아 가까스로 동서독관계를 발전시켰다. 1971년 9월 승전국은 동서독 정부의 동서베를린 및 양국의 교통·인적교류에 대한 협상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향후 두 독일 사이의 관계 개선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이 체결될 수 있었다. 이 조약은 동서독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소련이 조약의 세부적인 사항의 작성과 검토에 매우 깊숙하게 개입하였다(Sarotte 2001).

동독이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에 응했던 까닭은 그들의 선의에 기대거나 소련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독관계 개선을 통한 내부의 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호네커와 동독 지도부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즉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슬로건에 숨겨져 있던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독이 내세우는 화해와 평화라는 것이 사실 슬로건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동독이 서독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독 지도부는 경제 협력을 통해 소비재 공급을 개선하여 체제를 단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길과 교류의 확산으로 체제가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 사이에서 고민하였다(Thomas 2009, 42-43).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서독의 손을 잡았던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서독과의 관계 개선이 동독의 국내정책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안보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동독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핵무기가 이미 배치된 상황이었다. 서독에 배치된 NATO군의 무기 체계보다는 약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공포의 균형이 달성되어 있던 상황이었다.¹⁰⁾

본(Bonn) 정부가 이를 보증하였다(바크 외 2004, 41-42).

9) 비록 동독과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서독과 소련의 관계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1970년 8월 12일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은 1) 양국이 국제적 평화와 대타격을 유지하며 유럽의 발전을 도모할 것 2) UN 헌장에 따라 무력사용을 지양할 것 3) 현재의 국경선이 유지되어야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오테르나이 세 선을 유지) 4) 본 조약은 다른 양자/다자간의 조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5) 현재의 조약은 승인의 대상이며 본에서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발효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10) 소련의 SS-20의 미사일 배치와 미국의 퍼싱-2 미사일 배치로 말미암아 유럽의 국가들은 매우

둘째,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품을 수입하여 주민들을 달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서구의 차관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시킨다는 전략이 있었다. 당시 동독 지도부는 서독의 손을 잡은 결과물로 사회주의 틀을 유지하며 여러 서방세계와 교류할 수 있었고 국제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1973년 기본조약이 서독의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부터 동독은 세계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을 수 있었다. 이것은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할슈타인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수용은 해외의 차관 및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동독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기본조약 체결 당시 ‘양 독일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동독의 최초 헌법은 공산당 주도의 독일통일을 명시해 놓았지만 이미 1955년도부터 ‘두 국가론(Zwei-Staaten-Theorie)’을 주창하였다. 이 시기에는 아직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1968년 헌법에서는 스스로를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동서독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양 독일의 분립을 의미하는 ‘경계설정(Abgrenzung)’원칙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동독 측은 향후 서독 주도의 통일논의를 완전히 물리치기 위하여 자신들을 서독과 관계없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승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서독측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소련이 개입하여 동독의 양보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양국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또는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4조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각국의 국가권력이 각자의 영토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양국은 국내 및 대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라는 6조의 절충안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큰 갈등을 빚었다. 또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말미암아 대탕트 국면을 열어붙었다. 하지만 일련의 군사적인 갈등은 두 제국인 미국과 소련의 문제였지 동서독의 직접적인 위기는 아니었다. 마치 북한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는 형식적으로 반발하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반발한 것과 동일한 이치였다. 그리고 1953년 베를린,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 프라하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소련은 무력을 통해 시위를 진압하였고 이를 계기로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선언한 상태였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강화하면 서구의 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헬싱키 선언과 문화적 자율화는 서독과의 관계 개선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슈타지와 경찰 병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이탈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본조약을 통해서 동서독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동독은 기존의 ‘2 국가론’을 넘어서 사실상 ‘2 민족 2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동독은 1973년 UN가입과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동독이 서독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국가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1974년 헌법에서는 동독을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 (Sozialistischer Arbeiter-und Bauernstaat)’로 규정하고 민족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였다 (진종덕 외 2018, 271). 이는 서독이 결코 원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동독을 개별적인 주권을 지닌 국가로 대우할 수 밖에 없었다.¹¹⁾ 서독은 당장의 비현실적인 통일은 내려놓고 ‘1 민족’유지를 통하여 동서독간의 공통분모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다만 ‘어떠한 1 민족을 형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사실 이 시기 분단 독일은 과거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인종민족’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양국의 정치제도의 차이가 심하여 오히려 민주와 반(反)민주의 대결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민민족’을 내세울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에 서 있었다.¹²⁾ 이에 빌리 브란트는 언어, 문화, 역사, 인적 유대를 강조하는 ‘문화민족’과 ‘의식민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최영태 2012, 305). ‘문화민족’은 학술적으로 훌륭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독일의 분단상황을 완화하고 관리하는데는 충분히 유용한 개념이었다.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정부는 위와 같은 성격의 ‘1 민족’ 원칙을 유지하였다. 만일 동독의 ‘2 민족 2 국가’를 완전하게 승인하였더라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의 움직임이 유무형적인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서독은 냉엄한 현실 때문에 ‘민족’과 ‘통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동방정책을 이어나가면서 접촉의 면적을 확대해갔다.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의 헬무트 콜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정부의 성과를 성실하게 이어받아 교류협력을 지속하였

11) 1987년 9월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이 최초로 본을 방문할 당시 동독 국가를 연주(가사를 생략하였지만)하여 사실상 타국의 정상수준으로 의전을 실시하였다.

12) 독일의 사회학자 마리오 라이너 랑시우스는 민족주의가 기본적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속성, 분류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이 가치를 수용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행동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민족의 4가지 이념형을 제시하였다. ‘인종민족(Volksnation)’은 인종, 언어, 종교 등에 기반하며 주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집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며 다른 인종을 열등하게 간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문화민족(Kulturnation)’은 문화를 공유하는 초정치적인 민족이며, 문화적으로는 평등하고 동질적이지만 정치적으로 일치되지 못한 민족을 지칭한다. ‘계급민족(Klassennation)’은 동독이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급의 대표자가 정치엘리트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률과 주권에 의해 작동하는 ‘시민민족(Staatsbürgernation)’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서독에서만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바이마르 공화국도 ‘시민민족’을 형성하지 못했다(Lepsius 1985, 43-64).

다. 이는 서독 내에서 대동독 정책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동방정책은 단순한 경제교류를 넘어섰다. 가령 동독의 사회주의 통합당은 헬무트 슈미트의 사임 이후 야당으로 전락한 사회민주당과의 정치적 교류를 본격화하였다. 이는 전임 수상인 빌리 브란트가 과거 동독 측에 제안한 것이었지만 수용되지 못했던 정책이었다. 동독이 입장을 변경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야당과의 접촉을 확대하여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의 적대적 대동독 정책의 등장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정권을 잃었던 서독의 사회민주당 역시 ‘동방정책’을 지속시키고 여당을 압박할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독과의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공산당 특유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 당시 동독의 사회주의 통합당은 ‘사회 민주주의’를 ‘반-사회주의’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들을 ‘비-사회주의적인’ 정치세력으로 변경하였다(Ash 1994, 313-322). 또한 1985년에는 사회민주당의 기본가치위원회와 사회주의 통합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사회과학아카데미와 함께 ‘이데올로기 갈등과 공동의 안보’라는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였고 사회주의 통합당 정치국이 이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이 동독 내부 재야세력의 반정부 투쟁의 도구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당 지도부는 이 문서를 철회하였다(파울렌바흐 2017, 158-159). 정리하자면 1989년 이전까지 교류협력 정책은 민족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었으며 통일 또한 가시적이지 않았다. 다만 서독은 ‘2 국가의 현실은 수용하되 1 민족’의 보루는 지키면서 양국 사이의 당면한 과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하고 있었다.¹³⁾

Ⅲ. 민족의 부활에 대한 비판 및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돌파

1. 민족주의의 급작스러운 부활과 이에 대한 반발

서독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동시에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과거사에 대한

13) 실제 1984년과 1987년의 서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73%와 78%가 독일인은 1민족이라고 또한 ‘동서독이 두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83%와 79%가 두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1민족 2국가’는 서독에 안정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국가로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하였음에도 ‘동독이 외국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6%와 67%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2 국가의 사실상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의 관계가 외국은 아닌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한운석 2003, 85).

새로운 해석이 에른스트 놀테와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지식인들 차원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반발감이 주를 이루었다.¹⁴⁾ 독일의 민족주의를 연구한 한스 몸젠은 언스트 겔너의 ‘근대화 테제’에 동의하면서 전후 서독에서는 더 이상 민족적인 상징과 의식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오히려 전독일적인 감정은 동독 측에서 더 강력했다고 평가한바 있다(Mommssen 1995). 이처럼 민족주의는 1990년까지 좌우 양측의 지식인에게 환영받지 못했으며 재통일은 금기사항이 었지만 심층적 차원에서는 국가와 민족으로 되돌아 가야한다는 생각은 남아 있었다(박용희 2016, 13-15).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89년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급변사태가 발생하였다. 장벽의 붕괴 소식을 접한 헬무트 콜은 폴란드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베를린으로 달려갔다. 동독의 변화를 포착한 헬무트 콜은 이를 변화의 기회로 삼았으며 11월 10일 베를린 쇠네베르크 시청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 편엔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 민족이고 앞으로도 계속 한 민족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며 모두 함께 속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모든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가 고자 하며, 서로 연대해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이고, 통일이고, 권리이며 자유입니다(콜 1998, 100).”

메리 풀브룩이 지적하였듯이 1990년 독일의 통일은 ‘민족주의’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의 몰락’에서 시작되었다(Fullbrook 2005, 253).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다루지는 않겠다. 동독 사회주의 체제 내부의 개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갑작스럽게 민족주의를 창출하였으며 동독의 국경을 넘어 전 독일의 민족적 감정을 고조시키기 시작하였다. 콜의 공세와 동독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드레스덴 시의 서기장을 담당하였고 호네커에 비판적이었던 한스 모드로가 동독 수상에 취임하였다. 이는 기존의

14) 역사가 논쟁을 촉발시킨 에른스트 놀테는 이 시기 자신에 대한 반발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우리가 수년 내에 흡사 파시즘과 닮은 연방공화국의 집단수용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68세대’ 지도적 인사들의 신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내게 증오에 가득 찬 상태에서 내뿜은 20대 학생의 말 즉 ‘당신들이 우리를 강제수용소에 처넣었다고 한 발언에 나타난 집단주의적 사고는 나, 그리고 나와 비슷하게 사고하는 동료들에게 새롭고도 오랜 적대자가 되었다(게를리히 2014, 12-13).”

서기장과 정치국 위주의 국가운영방식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력으로 동독의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모드로는 11월 17일 서독 측에 조약공동체를 제안하였다. 동독의 상황을 지켜보았던 헬무트 콜은 동독의 사회적인 움직임을 활용하고자 11월 28일 곧 바로 독일통일을 위한 10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주변국들과 동독사회를 자극하였다.

당시 헬무트 콜이 추진했던 급진적인 통일정책은 서독의 진보진영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원칙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다. 첫째, 진보진영은 전환의 국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민족주의’를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았다. 68혁명 이후 의회 밖 운동에 한계를 느낀 이들이 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하였고 사회민주당이 청년세대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정치 무대에 데뷔하였다. 1970년대 약 30만 명의 당원이 가입하면서 사회민주당은 보다 젊어졌으며 노동계급 색채에서 벗어나 보다 지식인화되었다. 또한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사회적 변혁운동은 1980년대 녹색당 출현의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송충기 2008, 52). 이들 세대는 제도권 정당에 유입된 만큼 급진적인 색채는 약화되었지만 ‘민족’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세계시민주의’ 가치에 더욱 방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2 국가’에 기반을 둔 기존의 동방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국가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였다.¹⁵⁾ 실제로 헬무트 콜 정부의 통일추진을 지지하였던 빌리 브란트와는 달리 사회민주당 당수 오스카 라퐁텐을 비롯한 당내 좌파 주류계열은 민족통일에 미온적이었다. 1980년대 말 이들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며 동독의 독자적인 시민권을 인정하는 입장도 보이고 있었다(이동기 2009, 186).

경쟁자인 헬무트 콜이 통일에 대한 원칙과 각론을 제시하여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1989년 12월 사회민주당 당 대회를 통해 선포된 베를린 강령은 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열정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다.

“3장 사민당은 과거 민족국가로의 회귀를 바라지 않는다.. 독일의 새로운 민족주의는 동독의 경제 문제, 두 개 국가의 현실적 과제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사민당은 통일된

15) 1959년 〈양철북〉을 통해서 나치를 열렬하게 추종하였던 독일 소시민의 무비판적인 정신세계를 비판하였던 쿤터 그라스에게도 독일의 재통일은 분명 위협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독일 학계의 경직성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독일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안드레아스 후이센에 따르면 1980년대에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는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진통적인 좌파적 입장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여러 지적인 활동이 있었지만 보수적인 독일의 학계는 민족과 탈민족이라는 이분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Huyssen 1992, 70).

유럽을 원한다. 헬싱키에서 시작된 유럽안보협력 과정이 미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1925년 이후 사민당 강령에 제시된 유럽합중국은 지금도 실행될 수 있다. 4장 유럽과 독일 통합의 길에서 유효한 것은 두 개의 독일 국가간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고 포용성 있게 형성하여 자체 없이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조약의 기초에서 개별적 합의, 조약공동체, 국가 연합 궁극적으로는 연방국가적 통일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진중덕 외 2018, 367).”

기본조약에 기초한 ‘국가연방’은 분명 통일의 가능성을 분명 열어 둔 것이었다. 또한 성급하게 통일을 추진할 경우에 감내해야 할 경제사회적 문제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의 회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낼 위험성이 있었으며, 특히 콜 수상이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평화’, ‘유럽’, ‘연대’와 같은 구호들만으로는 급변하는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같은 시기 녹색당에서도 당내 좌파들은 ‘2 국가’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당내에서 보다 현실주의적인 집단은 ‘2 국가’ 원칙을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관철하였다. 특히 대표적으로 안체 볼머(Antje Vollmer)는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양 독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생태적 연방’을 제안하면서 성급한 통일과 ‘2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였다(이동기 2010, 172-175).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이러한 지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동은 민첩하지 못했다. 게다가 여러 고민을 담고 있었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정책은 자칫 동독의 유지를 가정하는 모드로의 조약공동체와 유사하게 간주 될 가능성도 있었다.

둘째, 진보진영의 인사들은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열망에 빠진 동독주민들을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게 바라보았다. 서독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동독주민들을 새로운 체제를 고민하는 시민이 아니라 자본주의 유혹에 휩쓸린 소비자로 비추어졌다. 사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의 많은 사람들은 100 마르크의 방문환영 지원금을 받고 유럽 최고의 백화점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던 카푸하우스 데스 베스텐스(Kaufhaus des Westens)로 달려가 과일과 음식 등을 구매하였다(Deutsche Welle 2019/11/07). 동독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주민들은 오로지 외화로만 구매 가능한 ‘인터샵(intershop)’의 품질 좋은 수입제품들을 선망하고 있었다. 학식이 풍부한 지식인들, 부르디외의 용어를 빌리자면 ‘상징적 자본’을 보유한 이들의 눈에는 상품에 열광하는 동독의 주민들의 모습은 천박해 보였을 것이다. 가령 제 2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68혁명 세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인 클라우스 오페는 1991년의 논문에서 통일된 독일이 헌법에 기초한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이 글에는 성찰적이지 못한 ‘민족주의 열정’과 ‘시장경제’

에 대한 저자의 지나치게 냉소적인 입장 또한 그대로 나타나 있다(Offe 1991). 진보진영은 나치즘의 태동을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의 기묘한 결합으로 간주하였는데 통일과정에서 이 두 사항이 당시 독일 땅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시기 독일의 사회적 변화가 나치즘을 곧바로 태동시키지는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소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의견이었지 독일 주민들이 공유하던 생각은 아니었다. 1989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귄터 그라스는 함부르크 중앙역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통일국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국의 배반자’라는 모욕을 들었다(그라스 1990, 99). 1990년 4월 만하임대학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민주당 지지자의 72% (적극지지 16%, 지지 56%)가 통일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 지지자들의 81%에 비하면 낮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68세대의 당 지도부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많았음을 반증한다. ‘세계시민주의’ 섹체가 더욱 강했던 녹색당의 지지자들 가운데 약 51% 만이 통일을 지지하였고 49%는 통일을 선호하지 않았다.¹⁶⁾ 정리하자면 전환적 국면에서 탈민족주의적 지향의 정치세력은 통일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였다.

2.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정면돌파

통일과 이를 향한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헬무트 콜은 서독의 경제적 번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하면서 동독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실제로 헬무트 콜은 서독의 ‘마르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화폐이며 서독과의 경제 통합은 동독지역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였다(Kohl 1994, 123). 그리고 동독주민들도 이에 호응하며 “서독 마르크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겠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통일을 열망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헬무트 콜 수상의 허장성세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었는지 만천하에 밝혀졌다. 가령 헬무트 콜이 무리하게 추진한 1:1 비율의 ‘화폐통합’은 동독 경제 뿐만 아니라 서독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주민들마저도 ‘전환기’에 콜 수상을 지지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동독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자 민족문제가 사회문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16) 1990년 3월 동독 총선거에서 통일을 지지하는 연합정당 ‘독일을 위한 동맹’이 승리하면서 통일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1989년 말과 1990년 초의 사회민주당 지지자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위의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있다(Kuechler 1992, 60).

빚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헬무트 콜은 “만약 우리들이 이 운명적인 순간에 재정적인 이유로 통일을 회피한다면 독일연방공화국은 역사 앞에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비용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였다(콜 1998, 200).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헬무트 콜의 리더십이 반향을 일으킨 것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선전에 의해 당원과 주민들이 선동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했더라면 콜의 언설은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진보진영의 비판과는 달리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는 완전히 신자유주의적이지는 않았다. 즉 독일의 자본주의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하위유형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서독은 강력한 노동운동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국가가 상당한 복지와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시장은 ‘조정’되고 있었다.¹⁷⁾ 물론 이 ‘사회적 연대’라는 것이 통일 이후에도 잘 작동한 것은 아니었으며 동독출신과 서독출신 사이의 마음의 장벽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정 수준의 사회적 연대와 자신감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무모해 보이는 통일에 도전해 볼 수는 있었던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헬무트 콜이 독일통일의 주인공으로 등극하였고 사회민주당의 진보 세력과 녹색당은 민족과 통일을 경시하는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특히 1990년 12월의 통일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참패하였고 녹색당은 정당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종합해보자면 독일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조금 달랐다. 동방정책으로 비롯된 교류협력정책은 진정한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을 현실화시키지는 못했다. 문화민족을 통해 ‘1 민족’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교류협력이 이들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연결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동독사람들은 서독의 발전과 문화에 호의적이었다. 서독의 주민들은 동독에 대해 알아갈수록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다만 화해와 협력을 마음이 통하는 집단들 사이의 행복한 교제가 아니라 관계가 나쁜 양측이 더 큰 갈등을 방지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점점을 넓혀가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서독은 분단과 냉전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17) 가령 복지국가 연구자인 에스핑 앤더슨은 서독을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와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하였다(Andresen 1990). 또한 정치학자인 피터 홀은 독일을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분류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를 자유방임적인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와 구분하였다(Hall 2001).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더 높으며, 산업내 기업 간의 기술이전과 교류도 활발하다. 또한 국가가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특수 기술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독일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특수성은 건강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Culpepper 2001).

향후 통일 기반 마련에 성공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독 당국이 ‘하나의 독일’이라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정하였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민족’이 부활하여 양국의 국민들을 결합시키고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동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불가피하게 인종·종족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빌리 브란트의 주장과 같이 ‘재통일(Wiedervereinigung)’이 아닌 ‘새로운 통일(Neuvereinigung)’을 이룩하였다.

IV. 한반도에서의 함의

독일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1 민족의 원칙을 우리의 상황에 알맞게 고수할 것’, ‘사회적 연대를 확립하여 통일의 역량을 확보할 것’, 그리고 ‘화해 및 교류협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그 한계점을 냉철하게 인식할 것’이다.

1. ‘1 민족’ + ‘1 국가’의 원칙유지

서독의 정치지도자들이 여러 사회적인 변화와 국제적인 제약 속에서도 ‘1 민족’의 원칙은 고수하면서 ‘2 국가’의 현실을 유연하게 수용하여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향후 통일의 문을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앞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동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는 ‘1 민족 2 국가’의 원칙을 사수하였다. 또한 기독교민주연합의 헬무트 콜 수상 역시 1983년 6월 “현재 두 개의 독일이 있지만 독일 민족은 하나다. 민족의 존재는 정부와 다수결의 결정에 의거하지 않는다. 이는 역사의 결과물이며, 유럽의 한 복판에 위치한 기독교 유럽문명의 한 부분이다. 독일민족은 민족국가의 형성이전부터 존재하였고 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 원칙을 재확인하였다(Asmus 1984, 403). 당시의 현실은 ‘1 민족 2 국가’였으며 동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 민족’을 고수하여 현실의 2 국가가 향후 1 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서독 관계개선과 유럽의 평화확립에 기여하였다.

한반도에서는 독일과는 상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민족과 국가의 단위가 사실상 일치하였던 한반도에서는 남북 모두 ‘2 국가’의 승인을 용납하지 않았고 모두 ‘1 국가’를 지향하였다. 자신의 체제에 확고한 자신감을 보였던 북한은 1970년대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여 '1 국가' 수립을 위한 평화공세를 실시하였다. 반면 힘의 관계가 역전된 탈냉전기에는 남한 역시 북한을 '2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 1991년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정의하여 '1 국가'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면서도 정작 평화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만을 반복해왔다.¹⁸⁾ 이처럼 남북관계가 여전히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암울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존의 '1 민족 1 국가'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령 박명림은 '대한'과 '조선'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양국이 모두 경직적인 각자의 헌법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오히려 평화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남한-북한, 북조선-남조선의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조선'의 관계로 새롭게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박명림, 2020). 김상준 역시 남북한이 분단을 부정하고 있기에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이것이 분단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1 국가 수립에 매진하기 보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코리아 양국체제' 형성을 통하여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김상준 2018, 44).¹⁹⁾ 정치학자 정한울은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에서 '1 민족 1 국가'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사실상 '2 민족 2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기에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정한울 2017, 77-79). 이러한 논의들을 편의상 '2 국가론'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다.²⁰⁾

18)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기본합의서 모두 양국사이의 평화구축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지만 그 결과는 상이하였다. 구조적인 요인을 잠시 조망해보자면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은 미국과 소련의 확고한 양국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독일관계의 개선은 두 강대국의 마찰을 완화하였으며 유럽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의 상황은 달랐다. 이 시기 사회주의권은 붕괴하였고 1992년 한중수교로 말미암아 전통적 북중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립된 북한은 잠시 남북관계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폐쇄적인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잘못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남한이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했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가령 북한은 중국에게 북미, 북일 수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중수교를 늦추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기 일본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은 북한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아놀드 켄터와 북한의 김용순 사이의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교차승인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복기해본다면 1991년 유엔동시가입 이후 남북 '교차승인'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였다면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 다만 김상준의 양국체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일종의 우회전략에 가깝다.

20)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작업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의 단기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상의 민족분단을 제도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기존의 통일론과 다른 비전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학자들의 아이디어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진정 ‘1 민족 1 국가’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의 전환이 현 상황에서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지는 조금 더 논의해보아야 한다. ‘2 국가론’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2 국가론’의 이론적 내적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의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통일과 민족에 대한 영향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김상준은 양국체제를 ‘한 민족 두 국가의 특수한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1 민족’이라는 사항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양국간의 유대와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통분모는 존재한다는 점을 일정 부분 전제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 및 세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통일과 민족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2 국가론’의 확산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북한과 단절적인 입장을 보이며, 한국의 점증하는 국방력을 통한 ‘소극적 평화’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민족과 국가의 단위가 사실상 동일하게 인식되어왔던 점을 살펴본다면 ‘2 국가’의 확립이 ‘2 민족’의 확립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다. 이 경우 우회를 통한 평화확립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약화될 수 있으며, 젊은 세대에 의한 한반도 냉전구조가 새롭게 확립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향후 비핵화와 그 후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제약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같은 군사·외교 영역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담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비핵화 청사진(CVID, 동결, 굿 이너프 딜)을 마련하는데는 협조하겠지만, 1994년 제네바 협약 이후 KEDO 건설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핵의 포기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및 향후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타산을 넘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부르게 ‘2 국가론’을 승인한다면 전환적 국면의 순간에 우리의 국내 및 국제적인 행동의 정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2 국가론’을 확립하여도 ‘1 민족’이라는 사실은 북한

작업이며 동시에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일시적으로 후퇴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정치의 균열축의 한 부분이 새롭게 변모함에 따라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자신들의 사상적 지지기반을 재구축해야만 하는 복잡한 정치적 작업이 될 것이다. ‘1민족+1국가’의 원칙은 명칭은 다르지만 위에서 언급한 현실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만 조금 덜 급진적인 방식으로 민족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정권의 정당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²¹⁾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북한 주민과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현 시점에서 '1 민족'은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멸하지도 않을 '사회적 사실'이다. 어쩌면 '1 민족'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1 민족을 기반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보다 더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즉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1 민족'을 기반으로 성급하게 통일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²²⁾, 남북의 공통분모인 '1 민족'을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을 매개로 하여 화해와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2 국가론'을 공식화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 양국체제에 대한 논의가 타당하더라도 이것을 공식화할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지점에서 실시 되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교류협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며 현재의 안보와 세력균형에 의한 수동적 평화구조의 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함께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박명림이 제안하였듯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허용된 관할구역으로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의 신설은 유익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철회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합의서'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에 준하는 형태로 확립시켜 국내법적 지위를 얻어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작업 역시 매우 유용할 것이다(정일영 외 2017).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북한이 완화된 형태로 '2 국가 2 민족'론을 제시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²³⁾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타나야

21) 박명림은 한반도에서 '국가'가 '민족'을 호명하였다면서 양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였다. 특정시점에서는 국가가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해서 민족을 형성시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국가는 그들이 형성시킨 '민족'속에 놓여있다. 즉 민족의 호명에 성공한 국가는 '민족 속의 국가'가 된 것이다.

22) 2021년 9월 29일 발표된 민주평통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응답은 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협력이 자유로운 상태 (34.8%), 동서독처럼 통일된 상태 (33.6%),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 (28.3%) 모름/무응답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63% 가량의 응답자가 기존의 통일국가와 다른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때를 만난 사상처럼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빅토르 위고의 격언처럼 과거와 같이 민족이 집합적인 열광을 불러일키는 시대는 지나갔다. 따라서 국민들의 이러한 응답을 일종의 '병리적 형태'로 간주하여 계몽하기보다는 '민족'을 보다 유연하고 새롭게 재해석하여 평화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23) 북한은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제시하였다. 이 시기 '민족'은 정치 상황에 따라 김일성의 민족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남한과의 협력 및 부분적 시장수용을 통한 경제발전전

알 수 있겠지만 남한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민족’이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교류협력의 가능성과는 별개로 ‘민족’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킬 수도 있다. 서독이 인내심을 가지고 ‘1 민족’을 강조하면서 1 국가로 갈 수 있는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 동독의 ‘2 민족 2 국가’는 물리쳤던 점. 그리고 사실상의 (de facto) ‘1 민족 2 국가’를 안에서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1974년 동독과 미국의 수교를 매개하여 냉전구조하에서의 평화를 극대화한 서독의 전략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2. 사회적 연대에 입각한 통일론의 재구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독일에서는 ‘민족’을 호명하고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당시 서독에서는 동독의 주민과의 연대를 통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1989-1990년이라는 시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민족주의와 탈민족적 세계시민주의가 경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긴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본다면 세계시민주의적 가치가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켰으며 새 시대의 ‘사회적 연대’ 확립에 일정 기여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도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적 입장에서 학술적인 논쟁이 전개되었다. 주로 역사학자 및 정치사회학자 사이의 논쟁이었지만 이러한 논의가 통일정책 혹은 대북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심화 및 일련의 다문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향후 ‘민족’과 ‘세계시민주의’ (혹은 탈민족)간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2021년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독일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민족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세계시민주의도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론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① 민족주의의 쇠퇴와 세계시민주의의 미확립: 먼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와 ‘민족 회복’의 당위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0년도

락을 ‘민족’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 모두 열려있었다. 북한 역시 어느 한 방향을 고수하지 않고 국내의 상황에 맞게 국가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3%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5%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젊은 청년층(19~29세)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9%에 불과하였고 이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인 36.7% 보다 적은 수치였다. 또한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남북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37.9%로 '같은 민족이니 까'의 37.3%의 응답을 최초로 넘어섰다.²⁴⁾ 사실 두 선택지에는 다른 철학적 윤리적 바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쟁방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 임에는 틀림없으나, 실용적이고 생존적인 이유에 가까우며 이는 또한 평화학자 갈통이 제시한 '소극적 평화'에 가깝다. '같은 민족이니 까'라는 응답은 비록 일정 부분 종족과 혈족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지만 공동체와 연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여론조사와 대비된다. 1994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1.4%의 응답자가 통일에 찬성하였고, 통일에 반대하는 응답은 8.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민족통일론의 쇠퇴 원인이 단순히 '시간'의 탓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분단 이후 45년이 경과된 1990년경에는 재야와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강력하게 고조되던 시기였다. 분단 49년인 1994년과 분단 75년인 2020년의 대비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겪었던 사회 변동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에 기반한 통일론이 약화된 원인이 민족주의가 인종주의적인 방향으로 타락하여 적실성을 상실한 것인가? 사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많은 학자들은 기존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폐쇄성과 배타성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모든 민족주의를 인종주의의 하위유형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최장집의 지적처럼 대체적으로 민족주의는 '접두사'를 취하고 있으며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범주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다(최장집 2007, 22). 한반도에서는 일찍부터 민족국가를 형성한 까닭에 민족주의는 사실상 '텅빈 기표(empty signifier)'이며 동시에 '상수'였으며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저항', '발전'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가 표면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종족성을 지니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시민적일 수 있다.²⁵⁾ 실제로

24) 같은 조사에서 '같은 민족이니 까'를 답한 비율은 20대에서 28% 30대에서 34.1%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하여'에 대한 응답은 20대 48.6%, 30대 34%로 나타났다. 즉 청년세대들에게서 민족주의 성향은 약화되고 있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300-314).

25) 이스라엘의 이민통합부 장관을 지낸 야엘 타미르는 시민적 민족주의 역시 어떠한 단일적인 지향을 지니기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그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적 민족주의'라는 틀 안에서 '종족적 민족주의'가 발현된다고 보았다(Tamir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보다 성숙해지고 다채로워졌다.

민족주의가 통일론의 쇠퇴 원인이 아니라면 이와 대비되는 ‘세계시민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다문화주의)’가 확립된 것이 쇠퇴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또한 모범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세계시민주의가 주창했던 가치들을 한국 정치가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격인 독일의 시민들은 기존의 ‘국가’와 부침을 겪으면서 탈민족적 ‘세계시민주의’를 창조하였고 그 덕분에 민주적인 가치를 자국과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었다. 가령 페미니즘, 생태주의, 다문화주의, 성적소수자의 권리 향상 등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논의였고 한국은 이미 형성된 세계시민주의적인 가치와 요소들을 한국실정에 맞게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외국인의 수와 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2019년 기준으로 252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중이며 이는 전체인구의 6.6%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인이 110만명이고 그 중 70만은 조선족이다. 그리고 유교권 국가인 베트남, 태국, 일본인들을 합하면 50만 가량이 된다. 즉 소수민족이 다수를 이루는 영국의 런던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경제 구조가 미국이나 EU만큼 개방적이지 못하며, 대기업 주도의 경제 구조 속에서 일부 기획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노동력의 충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2008년도 다문화 가정지원 법을 시작으로 몇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주변화된 이들의 목소리는 제도권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이다. 세계시민주의는 아직까지 한국 정치사회의 하나의 균열 축으로까지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민족주의는 쇠퇴하고 세계시민주의는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② 사회적 연대의 약화: 사실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내용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양자 모두 사회적 연대를 이룩하는 각각의 방편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된 공동체’라 지칭하였듯이 민족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정서적, 문화적으로 단결시켜

2019). 또 다른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연구자인 아자 가트 역시 유럽연합은 순수하게 시민적인 측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공유하는 인종적 친밀감과 연대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가트 외 2020, 374).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종족적 민족주의’ 역시 ‘시민적 민족주의’와 공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정의당의 노선을 살펴보면 ‘종족적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및 ‘소수자 권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내포하고 있었던 평화, 평등, 자유의 요소들을 탈근대 진영에서 지나치게 평가절하했다는 홍석률의 주장은 타당하다(홍석률 2006).

연대를 창출해내야만 유지가능하다. 세계시민주의는 기존의 민족단위의 연대를 보편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단위와 민족단위가 일치하였던 한국에서 ‘민족’은 그 자체로 ‘일반의지’를 담고 연대를 이룩할 수 있는 그릇이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고도성장기에도 양극화의 조짐은 발생하였지만 민족은 분명 사회구성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훌륭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공동체와 연대가 급격하게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는 ‘민족’을 호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민족주의가 또 다른 도덕 혹은 사상으로 대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족감정의 약화는 환영할 일이 결코 아니며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울한 징표이다. 2019년 개봉한 영화 『기생충』은 단순히 부자와 빈자 혹은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사실상 두 개의 다른 민족이 공존하고 있음을 폭로하여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는 영미권에서 블랙시트와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²⁶⁾

지금의 시점에서 1994년의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다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에는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의견에 62.28%(전적으로 동의 21.73%, 동의하는 편 40.53%)가 동의하였고, 반대의견은 18.07%(대체로 반대하는 편 14.6%, 적극반대 3.47%)였다. 게다가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격차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0%를 넘었다. 즉 많은 응답자들이 통일 이후 치루어야 할 비용과 사회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지지하였다.²⁷⁾ 물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을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발생한 IMF 위기 가운데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면, 충분히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일부분 희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고귀한 희생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잡고 있었다. 빈곤 탈피가 지상과제였던 시기에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극대화되면서 진취적이고 성실한 노동관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소비에 대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26) 정치평론가 데이빗 굿하트는 대학교육을 받은 런던거주자 및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민에 찬성하며 영국인의 정체성이 약한 집단을 Anywhere 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육체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영국인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고수하려는 집단을 Somewhere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Somewhere의 입장이 영국 정치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았다(Goodhart 2017). 미국 역시 위와 유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갈등하였고 이것이 트럼프의 등장과 포퓰리즘을 초래했다고 보았다(Levin 2017).

27) 다만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 경제성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49.27%,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41.67%를 차지하여 양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물질적인 진정성도 남아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밖의 타인을 존중하거나 수평적인 문화를 창출하지 못했으며 금전과 권력 이외의 다른 가치들을 성찰하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현 시점의 대한민국 사회에는 고도성장기의 규범은 남아있는 가운데 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발생한 아노미에 신음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젊은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듯이 기존의 성취만으로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행스럽게도 1989년 당시 서독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동독의 변화와 국제적 환경과 맞물려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민족의 회복과 통일이라는 미해결의 과제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실제 생활과 산업구조는 개인주의적이고 탈집단적으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동은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집단주의적인 통일담론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민족과 통일이라는 용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고 고도성장이 주는 희망,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던 시기에 확립된 통일론은 사회적 연대의 존재를 이미 전제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현실은 남북관계가 동서독관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 역시 서독의 사회보다 훨씬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의 통일론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보다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측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북측의 풍부한(혹은 값싼) 노동력’이라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슬로건을 과감하게 재고해야만 한다. 이 슬로건은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었던 시절에는 분명 나름대로의 희망을 제시하고 사회적 연대를 창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가 임계점을 돌파한 현 시점에서 이 슬로건은 사회적 연대를 창출하지 못하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지닌 집단은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풍부한 노동력’만을 지닌 존재들은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과실은 특정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세계화와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일부계층이 떠맡는 틀 속에서는 교류협력과 통일론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된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일정 부분 인식하여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지속성, 좌우분쟁의 최소화, 정부주도의 톱-다운 방식의 탈피를 모색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총 2장 (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국민협약안’은 2021년 12월 현재 국가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문건이 ‘복지국가’의 중요성과 사회적 연대를 부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가령 제 1장의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실현시켜야 할 가치’와 ‘도구적인 실천적 사항’이 혼재되어 있다. 뒤르켐의 분류를 따르자면 전자는 ‘성스러운 것’이고 후자는 ‘속(俗)된 것’이다. 따라서 1장의 앞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⁸⁾ 민족화해협력 정책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 홍보와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 판에 묘수가 세 번 나오면 그 판은 진다’라는 바둑계의 격언처럼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지지를 높이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비용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연대와 도덕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교류협력의 탈신화화

스티븐 핑커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란 이성을 통해 내면의 폭력성을 억제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간 시간이다. 비록 불행한 전쟁은 발생하였으나 인류는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폭력의 억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사회를 선두로 ‘권리 혁명’이 이루어졌다(핑커 2014, 649-813). 대한민국은 이 대열에 조금 늦게 참가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은 물론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 동물의 권리 증진 계획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여러 활동가와 민주주의적인 신념을 지닌 국민들의 노력으로 쟁취한 성과물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취는 남한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취는 역설적으로 남북을 보다 멀어지게 하였으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반복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과거의 반공주의는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와 정당성이 부족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생산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젊은 세대의 반공주의 혹은 반복주의 정서는

28) 연구자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한반도이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비핵화를 이룩한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이다”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인간의 존엄성)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비핵화 및 군사적 위협제거)’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문에 나타난 철도, 물류, 인도적 지원, 이동의 자유 등은 중요한 사항이기는 전략적인 실천사항이므로 별도의 장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성공’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노현중 2018, 20). 마치 독일의 68혁명 세대들이 자신들의 성취로 말미암아 동독과 떨어진 것과 유사하다.²⁹⁾

이러한 간극을 교류협력을 통해서 좁히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한다. 사실 독일에서도 사회적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독의 여러 작가들 가령 분단을 주제로 다룬 크리스타 볼프의 ‘나누어진 하늘’ 그리고 울리히 플렌츠도르프의 ‘젊은 W의 새로운 슬픔’은 서독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동기의 지적과 같이 서독인들은 동독주민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보다는 서로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더욱 확인했다. 서독의 좌파들은 ‘하나의 민족에 두 개의 분단국가’가 존재하는 분단 민족이 아니라 두 개의 새로운 민족 즉 ‘2 민족’이 형성되어 있음을 깨달았다(이동기 2020, 209). 가령 서독 DGB의 초청으로 방문한 볼프 비어만이 추방당한 사건, 베를린 봉기를 다룬 슈테판 하임의 부당한 제명,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루돌프 바로(Rudolf Bahro)의 투옥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서독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격분하였다. 이처럼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교류협력 정책이 즉각적으로 심리적 통합을 이룩한 것은 아니었다.

서독의 정치인들은 교류협력으로 인해 반감과 괴리감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동서독 관계가 파열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관리하였다. 그리고 당면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의 화해와 협력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사실 진보진영과 통일 운동진영에서는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낭만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화해는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이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제교류와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심리적 통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화해와 교류협력에 대한 탈신화화(demystification)를 통하여 현 분단상황과 단기간 동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다.

29) 또한 대한민국에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기표현의 가치와 긍정적인 의미의 개인주의가 증대되는 상황은 불가피하게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통일론과 대치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담론 내에서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적 세계시민주의 사이의 긴장을 사회적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초를 확립한 독일의 사례는 모범담안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서독 내에서도 다양한 논쟁과 갈등을 겪었다. 특히 서독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화 되는 과정에서 신좌파인 68혁명 세대가 부상하면서 보수적인 서독의 기독교민주연합, 이제는 기성세대로 간주되는 노동운동 중심의 사회민주당과 갈등하였다. 특히 이들은 독일국민들이 보인 민족국가에 대한 집착이 독재체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감정이 독일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신들 세대의 새로운 이념인 탈민족적인 '세계시민주의'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억압적인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다만 이 시기 민족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전히 민족통일은 요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 68혁명 세대들은 사회민주당의 주류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여전히 '세계시민주의'를 고수하고 있었기에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 연합안'을 고수하였다. 또한 단결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직접적으로 '독일통일'을 내세운 헬무트 콜에게 주도권을 내주었다.

사회민주당의 68혁명 세대와 환경운동가들은 분명 통일에 소극적이었지만 독일의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물론 갈등 그 자체에 시선을 고정하면 논쟁적이고 심지어는 자기파괴적이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독교민주연합의 완고한 보수성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터부시되었으며 동독 역시 '2 민족 2 국가'를 주장함에도 '1 민족'의 원칙을 유연하게 고수하고 '2 국가'를 묵인하며 협력과 평화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종족적 민족주의'를 청산하고 '시민적 민족주의'를 발현시킨 점, '조정적 시장경제'를 통해 노동자에게 부분적인 경영참여를 제도화하고 복지제도를 구축한 것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축한 '사회적 연대'는 통일의 동력였다.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의 친화성이 매우 높으며 '민족'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하였지 이를 퇴보시키지는 않았다. 현재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세계시민주의'역시 안정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두 입장의 공통분모를 이루는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어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모두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담론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학계의 일각에서는 교착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계하고자 다양한 ‘2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명 ‘1 민족 1 국가’론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착국면이 전부 ‘1 민족 1 국가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불리 ‘2 국가론’을 도입할 경우 평화마저도 확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발맞추어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론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면 ‘1 민족 1 국가’의 원칙은 유지하되, 기존의 일방향적이고 발전론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화해 및 교류협력의 실시는 분단을 완화하고 통일을 위한 작은 문을 여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가트 아자 · 야콥슨 알렉산더. 유나영 역. 2020. 민족: 정치적 종족성과 민족주의, 그 오랜 역사와 뿌리. 교유서가.
- 게를리히 지그프리트. 유은상 역. 2014. 에른스트 놀테와의 대화. 21세기 북스.
- 그라스 귄터. 1990. 조국을 모르는 어떤 녀석의 짧은 연설. 프리데만 슈피커 · 임정택.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창작과 비평, 99-103.
- 김상준. 2018. 코리아 양국체제: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 한국사회학 52(4), 39-75.
- 길혀홀타이 잉그르트. 정대성 역. 2009.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창작과 비평.
- 노현중. 2018. 민족통일론에서 시민통일론으로: 민족주의 통일론의 위기와 대안. 사회사상과 문화 21(3), 1-42.
- 누스바움 마사. 강동혁 역. 2020. 세계시민주의 전통: 고귀하지만 결함 있는 이상. 뿌리와 이파리.
- 민주평통. 2021. 3분기 국민 평화 · 통일여론조사.
- 바크 데니스 · 데이빗그레스. 서지원 역. 2004. 도이치현대사3. 비봉출판사.
- 박명림. 2020. 한국과 조선: 한조관계의 역사 · 이론 · 방향-남북관계의 종식을 위하여. 東方學志 190, 25-65.
- 박용희. 2016. 전후 독일사회와 민족담론 변천사-평범한 민족을 향한 길?. 경주사학 41, 1-29.
- 베른트 파울렌바흐. 이진모 역. 2017. 독일 사회민주당 150년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1. 2020 통일의식조사.
- 송충기. 2008. 68운동과 녹색당의 형성: 제도권을 향한 대장정. 독일연구 16, 51-75.
- 스티븐 핑커. 김명남 역. 2014.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 왔는가. 사이언스 북스.
- 이동기. 2009.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1(2), 162-198.
- _____. 2009.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책: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독일연구 17, 65-109.
- _____. 2010. 1989/90년 독일통일 과정 시 서독 좌파의 비판과 대안들. 서양사연구

43, 157-188.

- _____. 2020. 비밀과 역설 : 10개의 키워드로 읽는 독일통일과 평화. 아카넷.
- 이진모. 2004. 배제에서 통일까지:동·서독 노동조합(DGB-FDGB)교류의 성과와 한계. 독일연구 8, 21-55.
- 잉글하트 로날드 · 크리스찬 웰젤. 지은주 역. 2011.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근대화, 문화적 이동, 가치관의 변화로 읽는 민주주의의 발전지도. 김영사.
- 전종덕 · 김정로. 2018.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 백산서당.
- 정대성. 2019. 68혁명 상상력이 빛은 저항의 역사. 당대.
- 정일영 · 정대진. 2017.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통일연구 21(1), 151-177.
- 정한울. 2017.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정체성 부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평화연구 25(2), 43-86.
- 최승완. 2006. 냉전의 억압적 정치현실-1950/1960년대 서독의 공산주의자 탄압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0, 201-238.
- 최영태. 2012. W. 브란트의 '문화민족' 개념과 동방정책. 역사학연구 45, 291-316.
- 최장집. 2007.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 최상용 외, 민족주의, 평화, 중용. 까치, 17-62.
- 클라우스 메쉬카트. 2008. 68학생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트랜스내셔널한 성격. 독일연구 16, 95-109.
- 한운석. 2003.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거. 신서원.
- 헬무트 콜. 김주일 역. 1998.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해냄.
- 홍석률. 2006. 민족주의의 경합과 탈민족주의의 담론. 박찬승 편. 광복 60년: 한국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희망, 101-122.
- Mommsen, Hans. 김학이 역. 1995. 독일사에서 민족과 민족주의. 서양사론 47, 203-212.
- Ash Timothy Garton. 1994.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Vintage Book.
- Asmus, Ronald. 1984. The GDR and German Nation: Sole Heir or Socialist Sibling?. International Affairs 60(3), 403-418.
- Culpepper, Pepper D. 2001. Employer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Decentralized Cooperation in Germany and France. Peter Hall and David Soskice,

- ed.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275-306.
-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ulbrook, Mary. 2005. Nationalism in the Second German Unification, R.Speirs and J.Breuilly, ed. *Germany's Two Unifications: Anticipations, Experiences, Responses*. Palgrave Macmillan, 241-260.
 - Goodhart, David. 2017. *The Road to Somewhere : The Populist Revolt and the Future of Politics*. Hurst.
 - Hall Peter and David Soskice. 2001. Introduction, Peter Hall and David Soskice, ed.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1-68.
 - Held David. 2005. Principles of cosmopolitan order, The Political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G.Brock and H.Brighouse, ed. *The Political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27.
 - Huyssen, Andreas. 1992. The Inevitability of Nation: German Intellectuals after Unification, *The Identity in Question* 61, 65-73.
 - Klimke, Martin. 2010. *The Other Alliance: Student Protest in West Germany & The United States in the Global Six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hl, Helmut. 1994. Kohl's Campaign Promises March, 1990. Konrad Jarausch and Volker Gransow, ed. *Uniting Germany: Documents and Debates, 1944-1993*. Berghahn Books, 122-124.
 - Kuechler, Manfred. 1992. The Road to German Unity: Mass Sentiment in East and West Germany.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56(1), 53-76.
 - Lepsius M.Rainer and Jean A.Campbell. 1985. Nation and Nationalism in Germany. *Social Research* 52(1), 43-64.
 - Levin, Yuval. 2017. *The Fractured Republic: Renewing America's Social Contract in the Age of Individualism*. Basic Books.
 - Markovits, Andrei and Philip Gorski. 1993. *The German Left: Red, green and beyond*. Polity Press.

- Milder, Stephen. 2017. Greening Democracy: The Anti-Nuclear Movement and Political Environmentalism in West Germany and beyond, 1968-198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igton Richard. 2014. State, Society and Memories of the uprising of 17 June 1953 in the GDR. Palgrave Macmillan.
- Mommsen, Hans. 1983. History and National Identity: The Case of Germany. German Studies Review 6(3), 559-582.
- Müller, Jan-Werner. 2000. Another Country: German Intellectuals, Unification and National Identity. Yale University Press.
- Offe, Claus. 1991. Prosperity, Nation, Republic: Aspects of the Unique German Journey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German Politics & Society 22, 18-32.
- Pelz, William. 2016. A People's History of Modern Europe. Pluto Press.
- Sarotte, M.E. 2001. Dealing with the devil: East Germany Detente, and Ostpolitik, 1969-1973.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Tamir, Yael. 2019. Not So Civic: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Ethnic and Civic Nationalism?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419-434.
- Thomanek J.K.A and James Mellis. 1989. Politics, Society and Government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Basic Documents. Berg.
- Thomas, Merrylin. 2009. Aggression in Felt Slippers: Normalisation and the Ideological Struggle in the Context of Detente and Ostpolitik. Mary Fulbrook, ed. Power and Society in the GDR 1961-1979: The Normalisation of Rule? Berghahn Books, 33-51.
- Deutsche Welle <https://www.dw.com/>

● 투고일: 2021.12.31. ● 심사일: 2022.01.06. ● 게재확정일: 2022.02.08.
--

| Abstract |

The tension between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within German Unification Discourse? By focusing on its implication toward Korean Unification Discourse

Noh Hyunj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This research examined the tension between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within German unification discourse. The German case shows that social and democratic development can propel people to overcome the national division. However, at the same time, it can weaken the national unification discourse. Besides, this study reveals that West Germany achieved peace via inter-Germ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balancing the tension between “one nation” and “two states” while discarding East Germany’s “Two Nation-Two states.” The final chapter explores the possible conflict between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in Korean national unification discours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maintaining the “one nation, one state” principle by allowing compromise in detailed policy seems more appropriate than accepting the “2 states” principle.

〈Key words〉 German Unification, Ostpolitik, Nationalism,
Cosmopolitanism, Unification, Cooperation